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기록보관소를 안내중인 페터 피스터 씨와 통역을 맡은 한정화 씨.

민주주의 교육은 국가 성장의 힘이다

독일 정치교육 현장 탐방기

글 · 주은경 likedocu@hanmail.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팀은 지난 9월 21일(일)부터 30일(화)까지 열흘 동안 시민교육 전문가 12명과 함께 독일 연수에 참여했다. 연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독일 사민당 소속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으로 독일 민주시민교육관련 기관 방문과 독일연방정치교육원·한국선거연수원이 공동주최하는 한독워크숍에 참여한 것이다. 이에 연수에 참가했던 필자가 독일 정치교육의 현장을 보며 느낀 점을 기록했다.

왜 '독일의 정치교육'인가

1929년 대공황의 압박으로 독일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심각하게 동요하면서 대중의 불만을 조직하는 데 성공한 히틀러의 나치당. 그러나 히틀러는 불법적인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었다. 히틀러는 경제적인 불안에 눈이 먼 대중의 욕망을 발판으로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어 합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가장 민주적 헌법을 가진 국가가 가장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죄악을 저질렀다는 역설은 종전 후 독일사회에 민주주의 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자각시켰다. 1952년 연방정부와 16개 연방주가 각각 연방정치교육원과 주 정치교육원을 설립했다. 주목할 점은 이른바 보이텔스 바흐 협약이었다. 독일의 정치교육에서 이 협약을 빼고는 이야기가 불가능할 만큼 중요한 협약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정치교육에서의 교화와 주입식 교육의 금지이다. 어떤 경우에도 학생에게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여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둘째, 논쟁중인 사안은 논쟁 그 자체로 소개해야 한다. 셋째, 정치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당면한 정치 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분석하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견지하는 정치교육 기관이 가능할까. 보이텔스 바흐 협약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연수를 준비하며 여러 문제의식이 교차했다. 연수는 과거 서독의 수도 본에 위치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본부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독일사민당의 정치재단

“민주주의자 없이 민주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말이다. 그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차 대전 패배 이후 심각한 위기에 빠졌던 독일에서 최초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다. 그가 사망한 해에 그의 뜻을 기려 에버트 재단이 창립됐다.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 완성된 민주주의란 없다.’ 에버트 재단은 교육과 정책 활동을 통해 사민주의 원칙과 가치를 구현하는 비영리공익재단이다. 독일 주요지역에 6개의 교육센터와 12개의 지역사무소가 있으며, 105개국에 해외 사무소가 있다. 에버트 재단 측의 설명과 질의응답은 ‘정치교육에 있어 국가와 시민사회’, ‘독일 연방정치교육원과 에버트 재단같은 정치재단의 역할’로 모아졌다.

독일정부는 정치교육 내용에 관여하지 않고 시민사회와 정당의 교육재정을 지원한다. 정당들은 정치재단을 만들 수 있고 재정을 지원 받는다. 독일은 현재 6개의 정당이 있는데 6개 정당 모두 정치재단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석에 비례해 재정지원액이 정해진다.

1952년 설립된 연방정치교육원은 내무성 산하의 국가기관이다. 연방정치교육원의 모든

예산은 연방예산에서 나오며 수백 개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주 정치교육원은 주 예산에서 나온다. 연방정치교육원 예산은 지원금을 신청하는 재단과 단체에 배분된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절대 교육 내용에 간섭하지 않되, 단체들은 두 가지 조건 즉 ‘보이텔스 바흐 협약 준수와 모든 예산 지출의 투명한 집행’ 원칙을 지켜야 한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예산과 내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것이 정치적 중립의 중요한 초점이다. 물론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나 재단의 교육 내용이 중립적이라는 건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성향을 담은 교육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에버트 재단도 사민주의의 전체에 충실하다. ‘정치적 중립’이 정치적 입장 없음 또는 정치활동 금지가 아니다.

에버트 재단의 교육프로그램

에버트 재단이 실시하는 주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담당자들의 설명을 들어봤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담당자 크리스티안 크렐, 그는 사회민주주의 아카데미가 시작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6년 당시, 기민당과의 연합정부를 구성하면서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은 정체성 위기에 처해 있었다. “구동독 공산주의자들과 사민당에서 실망한 급진파들이 좌익당을 만들고, 메르켈 수상이 속한 기민당이 사민당의 교육정책노선을 흡수해갔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활동에 있어 동질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했다. ‘정당정치는 무엇인가’, ‘사민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토론해야 했다.”

50만 당원 가운데, 800명이 참가했다는 교육. 에버트 재단 측은 사민주의가 하나의 고정된 무엇이 아닌, 변화·발전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은 보수 양당은 물론이고, 정책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경우도 당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체계적인 교육으로 해결해가지 못하고 있다. 독일에서 당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정치재단 주도의 체계적인 교육, 세미나로 풀어나가는 모습은 주목할 만하다.

22년째 에버트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카를라술테 레케르트 씨는 기자아카데미 소장이 되기 전에는 재단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일하며 토크쇼 등에서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일을 상담해왔다.

“최근 독일 언론의 상황은 심각하다. 민영방송이 늘어나고 공영방송국조차 시청률에만 관심이 있다. 그로 인해 정치적인 내용이 단순화되는 추세다. 또 기자들이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로만 고용되고 있다. 저임금과 부족한 시간 때문에 양질의 취재를 할 여유가 없다.” 기자아카데미는 유능한 기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강의를 자원한다. 회당 10명의 참가자, 학술회는 1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등 총 연간 600명의 기자와 기자 지망생이 참여한다.

한국도 민주언론운동연합, 오마이뉴스 등에서 기자교육 등을 하고 있다. 내가 아는 기자,



구동독 국가보안부
기록보관소 단지

피디 중에서도 이 교육을 들었거나 강사로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비교하면 에버트재단 기자아카데미의 교육이 좀더 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듯해 보였다.

‘과거 역사에 대한 철저한 기록과 반성은 민주주의의 힘이다.’

다음날 아침 방문한 곳은 에버트재단 기록보관소, 이 기록보관소는 독일은 물론 세계적 노동운동의 역사를 모은 최대의 자료관이다. 100만 권에 달하는 저서, 잡지, 신문은 물론 5만 장의 전단지, 10만 장의

포스터, 100만 장의 사진, 10만 개의 역사적 깃발 등을 비롯해 필름, 음향자료 등이 디지털화 되어 있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사민당 대표였던 애인에게 보냈던 편지도 직접 볼 수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신사…… 너의 창백한 얼굴의 검고 큰 눈동자가 내 맘에 가득하다.”

1971년부터 에버트 재단에서 근무했다는 자료보관소 슈나이더 소장은 사민당과 노조를 연구한 본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이다. 자료수집, 검토, 체계화에 최근 정치교육의 관점이 부여되면서, 전통적인 견학을 비롯해 노동운동의 역사를 인터넷에 올려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 연구와 숙제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과거의 역사를 망각하지 말자

지난 1993년, 독일의 거물급 보수 진보 정치인들이 당을 초월해 망각저항협회를 만들었다. 과거 독일군 최고사령부가 있던 건물에 위치한 이 단체는 큰 건물 내부에 사각형 모양의 연병장이 있고, 거기에 수갑을 차고 총살대에서 서 있는 남자의 청동상이 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 했던 슈타우베르크 백작이 이곳에서 1944년 총살당했다.

우리와 대담한 안드레아스 에버하르트 사무총장은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발굴한다. 나치에 저항한 역사도 과거에는 특정 이데올로기가 독점해온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정당, 기독교민주주의 정당, 사민주의 정당 등 어떤 정당에도 소속돼 있지 않았던 사람들의 저항은 빛을 보지 못했다. 안드레아스 박사는 이번에 평범한 수공업자 엘서가 1938년 히틀러를 암살하려 했다는 새로운 사료가 발굴돼 오늘 그의 동상이 세워진다고 한다.

“피해자의 익명성을 제거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여한다.”고 하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다.

“학생들은 단지 텍스트를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직접 찾아서 한 사람의 역사를 조사한다.” 80년 5월항쟁에 대한 교육,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다. 독일학생들은 이러한 역사 교육에 재미있게 참여할까. 이들 역시 참가자들의 동기와 자발성을 높이는 문제에 고민이 컸다.

“과거사를 교육하면 독일 학생들도 재미없어 한다. 하지만 다른 주제로 수업을 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개이치 않는다. 20명 중에 3~4명이라도 관심을 갖게 되고 생각이 변한다면 그것으로 큰 변화다. 증인과의 대화를 평생 잊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 이러한 교육은 나중에 직업 선택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것은 인간에게 큰 선물이다.”

이어서 연수단은 '작센하우젠의 유대인 강제수용소', '동독 안기부 문서관리사무소 슈타지'를 방문했다. 단순한 기념시설, 자료관이 아니라 세미나 등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다. 과거의 역사와 기억을 민주주의 교육의 큰 자산으로 삼고 있었다.

프랑켄 바르테 아카데미와 정치교육 강사 시스템

베를린에서 기차로 3시간 정도 걸리는 독일 남부 뷔르츠부르크에 있는 프랑켄 바르테 아카데미에 도착했다. 이 단체는 40년 전, 에버트 재단이 노동운동가 교육을 위해 설립한 교육 기관이다. 아름다운 숲속에 여러 동의 건물을 가진 큰 교육연수시설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다. 너무나 깔끔한 숙소에 정성스런 음식까지도…….

프랑켄 바르테 아카데미 소장 브리기테 유헤스는 20여 년 전부터 에버트 재단 본부에서 일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무실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베테랑 교육활동가다.

‘주민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 컨셉이라는 이 기관은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조직, 컴퓨터 등 기술 분야, 숙소와 주방을 책임지는 직원 20명과 연구진, 자원봉사자 그리고 군대에 가지 않는 사회봉사요원들로 운영된다.

그녀의 설명에서 가장 관심이 있던 분야는 이들의 교육 지원 시스템과 강사인증 시스템이다. 연방정부의 성인교육부에서 강사인증을 하는 프로필 패스워드라는 것이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기록보관소의 수장고



프랑켄바르테 아카데미에서
진행 중인 엠네스티 회원 연
수 프로그램 참관

있다. 이 인증을 받으면 강사비에서도 일정 수준을 보장받는다. <QS20 Art>와 <Set lqw> 라는 잡지도 보여줬다. 일종의 교육매뉴얼 정기간행물이다. 그만큼 교육의 네트워크와 전문성 공유 수준이 높은 편이다.

독일 연방정치교육원과 선거연수원의 워크숍

독일 연방정치교육원과 한국 선거연수원이 공동주최하는 한독 워크숍이 시작됐다. 장소는 뮌헨 근교 투칭의 정치교육아카데미. 주 정치교육원이 운영하는 훌륭한 교육시설이었다.

한국에서 선거연수원, 양성평등교육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수단 그리고 독일의 정치교육 전문가,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 출신의 정치교육전문가들이 참여했다. 2박 3일 동안 <정치적 리더십과 정치교육>, <정치교육의 방법과 수단>, <정치교육을 위한 지도자 육성>,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응>, <정치교육에 대한 참여와 관심 높이기>, <정치교육의 평가와 영향>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그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정권교체가 정치교육에 영향을 미치는가’, ‘독일에서 정치교육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 되는가’ 였다.

휘빙어 연방정치교육원 부원장이 그 원칙과 현실 사례를 발표했지만, 보이텔스 바흐 협약의 아버지로 통하는 쉴레는 현재의 독립성으로는 부족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대해 독일 측 참가자들의 반론과 의견이 제출됐다.

“100%의 중립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의 제도는 현실적으로 공정하다.” (휘빙어 부원장) 즉 정권과 의회가 교체되어도 연방정치교육원장이 교체되진 않는다. 물론 그 독립성의 수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지만 민주주의가 그렇듯 독립성에도 완성된 독립성은 없다. 독립성 역시 그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정치적 중립이 정치적 무당파성으로 오해되어도 안 된다.

그러면 한국의 정치교육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은 어느 수준인가.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수준이 높은 독일과 반면 민주주의의 다원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한국. ‘민주주의 교육의 제도화’와 ‘시민교육의 네트워크 시스템’은 어떤 철학과 방향이 필요한가. 고민이 깊어진다.

글 **주은경**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기획위원, 방송구성작가